

건설동향브리핑

제556호 (2016. 4. 11)

■ 정책 · 이슈

- 2016년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IV)
- 정당별 건설 관련 총선 공약 분석

■ 경영 · 정보

- 건설기업 인적자원관리 환경 변화와 대응 동향

■ 경제 동향

- 2월 주택 공급 지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새 50년, 세계를 누빌 K-BUILD를 기대하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6년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IV)¹⁾

- 인센티브·규제특례 부여 통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

■ 국내 입주기업에도 인센티브 부여

-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기업 위주로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기업 유치에 위한 혜택은 미흡해 국내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새만금특별법」 개정(2015.8)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까지 자금·입지지원 적용
- 국내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 수립
 - 입지지원 : 「새만금특별법」 개정(2016.4 예정)을 통해 새만금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 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 허용, 입지지원 혜택 제공
 - 자금지원 : 지자체 재정자금지원기준 개정(2016.12 예정)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 포함
 - 세제지원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감면 검토(2016.6) 예정

■ 미개발구역 용지조성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 새만금은 수심이 깊어 대규모 매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 및 조성원가가 높고 그만큼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더욱이 새만금 내 국내 사업시행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해야 함에 따라 자금부담이 가중됨.
-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 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인센티브를 부여기로 함.
 - 새만금 사업시행자에게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 간 감면
 -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의 장기 임대를 최대 100년까지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 자금 부담을 완화기로 함.

1) 본고는 2016년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총 4회로 나누어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4회차임.

■ ‘새만금 규제프리존’ 조성, 규제청정 시범지역화

- 새만금 지역의 규제완화 수요를 감안,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기로 함.
 - 열악한 입지여건 및 신규 조성된 토지 특성을 감안한 규제완화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등에 비해 도시건축 분야 특례는 미흡했음.
 - 새만금 내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기로 함.
-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 투자여건을 개선함.
 - 기업의 새만금 지역 내 규제완화 요구가 발생할 경우, 새만금청이 기업의 진입장벽 및 활동제약으로의 작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지속적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

■ 인·허가 원스톱처리 및 행정구역 조기 확정

- 새만금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 구성을 통해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처리를 지원하고, 새만금청에 전담 지원관을 지정
- 행정구역 조기 확정을 위해 인근 시·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지역부터 행정구역을 결정, 지적등록 및 등기절차 지연을 최소화함.
 - 일부 입주기업은 네비게이션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 등 기초적인 사업환경도 조성되지 않고 있어 행자부에서 지자체 신청을 통해 이견이 낮은 지역부터 행정구역 부여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의 역할을 강화, 분산된 관리체계를 새만금청에서 총괄하여 관리기로 함.
 - 준공 후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를 맡은 지자체(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입주업종 선정 및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청이 총괄하도록 개선함.

박희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정당별 건설 관련 총선 공약 분석

- 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생활시설 개선 등에 초점 -

■ 새누리당 : 뉴스테이 활성화, 노후상수도 및 하수관 개량, 중소 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

- 준공후 기금지분 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를 완화하여 뉴스테이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를 추진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상수관로, 정수장)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 지자체 지원 강화

<각 시도별 새누리당 주요 공약>

분야	주요 개발사업
서울	• 서부광역철도(부천 원종~홍대입구)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동빙고~삼송) 구간 연장 추진,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터널 건설, 초·중·고등학교 노후 시설 전면 개보수 등
부산	• 대심도 지하도로망(만덕~센텀) 구축, 시니어제품 산업단지 조성 등
대구	•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 건립 완료, 대구광역시권 산업철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등
인천	• 원도심 재생사업, 강화~영종 연륙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신국제여객부두 구간 등
광주	• 광주 송정역 및 광주역 역세권 개발 등
대전	• 도시철도 2호선 도안신도시구간 조기 착공, 회덕IC 신설 및 대덕연구단지 동측 진입로 개설 등
울산	• 호계~강동 간 도로 개설, 울산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 확장 등
세종	• 선진국형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등
경기	•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및 인천발 KTX 경기도 내 정착역 신설, 일반철도 확충, 경기만 마리아의 성공적 개발 등
강원	• 제2경춘국도 신설,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충북	•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충북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완공 등
충남	• 대산~당진 고속도로 확장, 장항선(신항~대야) 복선전철,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	•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적극 지원,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전남	• 수출원예단지 조성, 섬 관광 자원화 지원 등
경북	• 田자형 국가 광역교통망 건설, 스마트 융복합 신산업벨트 육성 등
경남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수 등
제주	• 제2공항 조기건설, 예코창조산업 육성 등

자료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

■ 민주당 : 공공임대 공급 확대, 노후학교 시설 개선,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등

- 공공임대 주택을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하여 향후 10년 동안 재고량 250만호, 재고율

13%를 목표로 함.

-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노후 상수도 개선, 지역테마형 해양 관광지 및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추진
- 세계 3위권 고속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설립 추진

<각 시도별 더불어 민주당 주요 공약>

분야	주요 개발사업
서울	• 서울형 도시종합플랜 마련 등
부산	• ‘더불어 마을’ 만들기 사업,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등
대구	•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인천	• 산업단지 재정비, 인천도시철도 확장 등
광주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등
대전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문화예술복합단지과 창조산업단지 조성 등
울산	• 도시철도 건설 및 광역교통망 구축, 도시형 스타트업 밸리 조성 등
세종	• KTX 세종역 신설, 첨단산업도시 육성 등
경기	• 경기 북부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강원	• 동서고속철도(서울~춘천~속초) 조기 건설, 과학기술원 설립 등 여농개발 특구 지정 등
충북	•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주댐 공업용수 조기공급,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 조기 완공 등
충남	• 충남 문화·관광의 세계화 지원, 안정적인 물관리를 통한 용수 확보 등
전북	• 새만금 SOC 조기 구축, 연기금 등 금융중심지 육성 등
전남	• 도립 직업훈련원 설립, 목포 내항 개발 등
경북	• 농어촌 독거노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영천~태백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경남	• 실수요자형 임대주택 공급,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등
제주	• 제주 제2공항 건설, 주거복지 확대 등

자료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 민주당 지역공약

■ **국민의당 :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등**

-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찰 종료 후 예정가격과 최저가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등 추진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건설기업 인적자원관리 환경 변화와 대응 동향

-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예측 불가, 효율적 활용에 초점 맞춘 전략 필요 -

■ 건설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환경 변화

-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활동도 위축되고 재무적 불안정성과 수익성 저하가 뚜렷이 나타남.
- 건설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환경도 급변하고 있음.
 - 고용 관련 법·제도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도 기존의 기업 인적자원관리 관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정치·사회적인 요구도 커지는 상황임.
 - 기업 내적으로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경영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도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 및 경영과 직결된 정보 원천의 다양화 속에서 효율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성별·연령별 등 인적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다양화되는 고용형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어려운 경영 환경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조기 정착 등 전략적 요구도 증가

■ 주요 이슈

- 건설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건설기업 내부에서도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함.
 - 경기 위축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려움.
 - 인적자원의 수요에 대응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적정 인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저성장기에는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의사결정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므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저성장기의 핵심인력이란 기업에 필수적인 핵심 역량과 기업의 핵심가치, 문화에 부합하는 태도와 가치관 등 소프트 역량을 갖춘 인력을 말함.
- 따라서 인적자원의 역량 유지와 함께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결국 저성장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적자원의 효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핵심 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극대화 및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운용이 중요함.

■ 대응 동향

- 첫째, 조직 내 혁신적인 조직전략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핵심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필요함.
 - 인적자원관리제도를 세분화 및 차별화함으로써 핵심인력들이 성과를 최대로 발휘하고, 이러한 역량 발휘가 조직 전체에 변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평가제도 및 전략적인 보상제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함.
- 둘째, 성과주의를 지향하되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성과주의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 성과관리의 초점을 성과에 따른 차별적인 인적자원관리에 맞춤과 동시에 ‘책임’에 기초한 인적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함.
 - 개인과 조직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조직의 철학을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혁신 지향적이고 환경변화에 맞춘 전략적인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 조직문화의 혁신은 필수임.
 - 업무 및 사업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협력관계를 중요시하는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유기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들을 양성해야 하며 이들에게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2월 주택 공급 지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순환주기상 주택공급 실행지표인 착공·분양(승인) 실적은 감소세로 전환 -

■ 2월 주택 공급 지표 모두 증가

- 전국 2016년 2월 주택 공급 관련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함.
 -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만 3,723호로 전년 동월 대비 61.3% 증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52.1% 증가함.
 -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만 2,106호로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13.8% 증가한 6만 3,267호임.
 -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1만 5,130호로 전년 동월 대비 66.2% 증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6.0% 증가한 2만 5,246호임.
 -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3만 2,36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13.0% 증가한 7만 973호임.

■ 순환주기상 주택 인·허가는 증가세 여전, 착공·분양은 감소세로 전환

- 최근 5년 간의 주택공급 관련 지표들의 원계열을 HP(Hodrick-Prescott)필터¹⁾에 의해 순환주기를 살펴본 결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증가세가 지속되나, 주택 착공 실적, 분양(승인) 실적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3년 9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택 착공 실적은 주택 인·허가 실적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2015년 10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 분양(승인) 실적은 주택 착공 실적과 마찬가지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주택 준공 실적은 변동성이 2015년 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기의 고점과 저점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임.

※ 원계열에 대한 HP필터에 의한 분석과 더불어 전년 동월 대비 추이 결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임.

1) HP필터는 경제 시계열의 장기 추세 변동 및 순환 변동을 분석하는 데 자주 이용되며, 시계열의 순환 변동 성분의 자승합과 추세 변동 성분의 자승합을 평활화 계수로 불리는 일정 모수를 이용하여 합한 후 이를 최소화하여 장기 추세 변동의 시계열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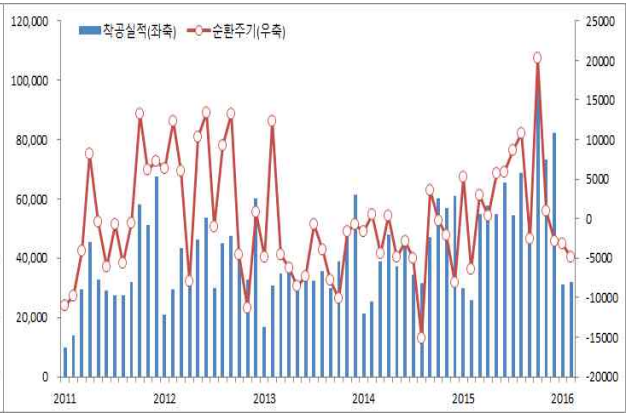
<주택 인·허가 실적 및 순환주기 추이>

(단위 : 호,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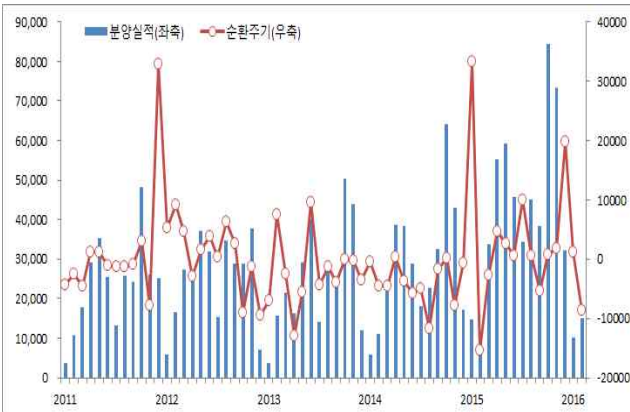
<주택 착공 실적 및 순환주기 추이>

(단위 : 호,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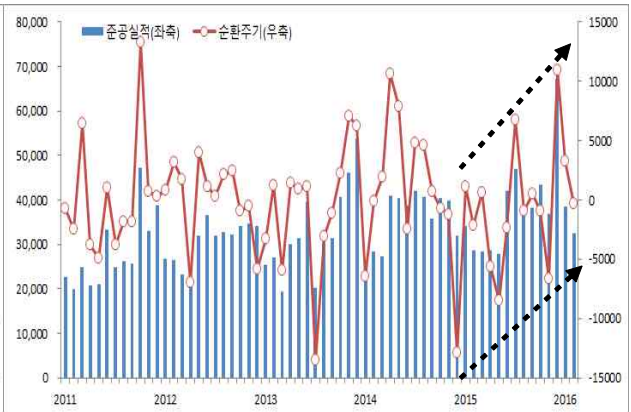
<분양(승인) 실적 및 순환주기 추이>

(단위 : 호, P)



<주택 착공 실적 및 순환주기 추이>

(단위 : 호, P)



주 : 순환주기는 HP필터에 의한 결과임.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택공급, 인·허가 증가세 여전하나 동행지표는 조정 추세

-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015. 7) 이후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인·허가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과잉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착공 및 분양(승인) 실적은 감소세로 전환되어 동행지표는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공급이 조정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급격한 경기위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LTV, DTI 등의 미세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4.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보상재결제도 개선 T/F 1차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공급과 주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기술정책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여
4. 7	한국은행	• ‘한국은행 지역경제동향 점검 워크샵’에 경영금융연구실 이홍일 실장 참여
	국토교통부	• 건설경제과 주관,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TF 회의(4차)’에 기술정책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여
4. 8	국민경제자문회의	• ‘부동산 전문가 그룹 2차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CM at Risk 이렇게 한다」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4월 14일(목) 오후3시, 강남구 대치동 대우 푸르지오밸리에서 「CM at Risk 이렇게 한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하였음.
- 제1주제 : Pre-Con 서비스 사례(발제자 : 정연석 GS건설 부장)
- 제2주제 : CM기업의 국내 CMAR 수행 사례(발제자 : 박상혁 한미글로벌 이사)
- 제3주제 : 미국에서의 CM at Risk(발제자 : 조상우 DPR Korea 지사장)
- 제4주제 : CM at Risk 국내 도입방안(발제자 :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문의 및 참조 : 기획팀(Tel. 02-3441-0803),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문과정」 개설

- 일정 및 장소 : 2016년 4.26(화)~28(목),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 내용 : 재무 모델 실습 위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비용 및 시간절약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
- 신청 문의 및 참조 : 출판팀(Tel. 02-3441-0691),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새 50년, 세계를 누빌 K-BUILD를 기대하며

연초부터 해외건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461억 달러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중동의 유가 하락이라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시장에 취약한 수주 구조와 천편일률적인 사업 방식이 중요한 요인이다.

건설은 전자나 자동차 산업에 비해 변화가 느리고, 변화의 내용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산업이다. 그래서인지 해외건설에 임하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전략도 외양만 바뀔 뿐 내실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대부분의 사업은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토건에서 플랜트로 공종만 바뀌었을 뿐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 수익성 문제는 후발국에 비해 역량이 우수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기술자들의 돌관작업에 의존한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담보를 전제로만 자금을 조달하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재원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문턱도 여전히 높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국내외 건설시장의 상황 변화를 볼 때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기에는 당면한 변화의 속도와 폭이 너무 빠르고 크다. SOC 예산 감축, 인구절벽 등 국내 건설시장은 빠르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신흥시장과 인프라 시장이 부상하고, 토목과 건축분야의 생산 기술 평준화와 신흥국 정부의 재정악화로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신흥국뿐 아니라 중동의 발주자들까지도 재정과 외환부족을 보완하고자 민간자본의 참여를 수주의 결정적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건설이 기존의 틀을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금, 정보, 역량에 있어서 혁신에 버금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자금과 관련해서는 개발금융으로서 민간 자원 활용의 확대와 공공 재원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 GIF나 KOIF 등 투자개발형 사업을 위한 국내 공공재원도 리스크 헷징을 기업 자체 보증 및 담보에만 의존해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다. 정보와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위급 외교를 통해 고급 정보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입수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건설의 전 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량 측면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발굴하고, 타당성을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기본구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재무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일명 디벨로핑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절실함이 리얼을 만든다’는 어느 책의 문구처럼, 정부와 기업 모두 절실함을 담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니스워치, 2016. 3. 18>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